

# 企業構造改革과

## 競爭政策 推進方向

### 目次

글·이남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

I. IMF 經濟危機는 왜 왔는가?

II. 經濟環境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?

III. 그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했나?

IV. 새로운 跳躍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?

1. 持續的인 企業構造改革 推進

2. 競爭制限的 規制의 改革

3. 獨寡占 構造 改善 및 談合慣行의 根絶

4. 消費者主權 確保를 위한 基盤 擴充

5. 디지털 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與件 造成

V. 맺음말

21세기에는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지식의 축적과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.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쟁, 자율,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경제운용의 기본들로 정착시켜야 한다.

이 글은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게재한 것으로 많은 참고바랍니다.

- 편집자주 -

## I. IMF 經濟危機는 왜 왔는가?

### 1. 韓國經濟의 發展過程

- 과거 政府主導의 經濟開發戰略을 불가피하게 선택
- 개발 초기에는 資本·賦存資源 빈약, 國內市場 협소
- 前後方 聯關效果(Spill-over Effect)가 큰 戰略産業 선정
- 정부에서 외자를 조달, 租稅 및 金融支援
- 輸出드라이브, 冷戰體制下 개도국에게 우호적인 貿易環境
- 政府主導 經濟開發 전략 추진 결과 : 빛과 그림자
- 肯定的 側面 : 量的 成長 달성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
- 否定的 側面 : 經濟시스템의 效率性 저하 → IMF 경제위기

### 2. 위기 당시의 우리의 모습

- 불안정한 巨視經濟
- 96년 이후 경기하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의 採算性은 크게 악화
- \* GDP성장율 : 95년 8.9% → 96년 6.8% → 97년 5.0% → 98년 Δ5.8%
- \* 제조업 자기자본순이익율(ROE) : 95년 11.0 → 96년 2.0 → 97년 Δ4.2%
- 경기위축에 불구하고 수출주력품 단가하락과 소비재·시설재 수입증가로 經常收支 赤字 지속 확대
- \* 경상수지 : 95년 Δ85억달러 → 96년 Δ230억달러 → 97년 Δ82억달러

## 특 집 기업구조개혁과 경제정책

□ 財務構造가 취약한 大企業의 連鎖倒産

○ 매출이 부진하고 수익성이 악화된 대기업이 過多借入에 따른 높은 金融費用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쇄도산

\* 97년중 한보, 삼미, 진로, 대농, 한신공영, 해태, 뉴코아, 기아 등이 도산

□ 外換保有高의 급감

○ 대기업의 연쇄부도,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, 동남아 외환위기,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해외차입금의 만기연장이 곤란해지고 외국인자금이 급격히 이탈

\* 가용외환보유고 : 96. 12월 294억불 → 97. 12. 18일 39.4억불

### 3. 危機를 부른 原因

□ IMF경제위기는 경제시스템의 總體的 失敗에서 비롯

○ 개발연대의 유산인 政經癒着, 不正腐敗, 官治金融과 아울러 정부·기업·금융기관간 등 각 경제주체간에 道德的 解弛(Moral Hazard)가 만연되어 市場經濟原理가 미확립

○ 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정책금융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익성보다는 膨脹主義的 經營 지속 → '大馬不死 神話

- 생산성 향상보다는 認許可를 통해 特惠를 추구하는 『프리미엄 體質』이 고착화

○ 은행은 경제논리보다는 擔保위주의 貸出로 상업적 성격의 "기업"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자원배분기구 역할

○ 정부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수입제한, 정책금융 등 保護와 支援위주의 政策을 견지

- 특히, 실천력있는 리더쉽 부재로 개혁작업이 지연

\* Booz Allen & Hamilton의 「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제도약」보고서 :

- 지난 5~10년동안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, 해결을 위한 根本的·具體的 實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경제위기의 하나로 지적

○ 냉전종식 이후 전개된 世界化·情報化의 흐름에 대한 신속한 適應 失敗

## II. 經濟環境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?

### 1. 經濟環境 變化的 양상

- ◇ 世界가 하나의 市場으로 통합되면서 競爭이 더욱 격화
- ◇ 知識과 情報가 價値創出의 主要源泉으로 등장
- ◇ 企業의 成敗를 消費者가 결정짓는 消費者中心時代 전개

### 가. 國境없는 無限競爭

- 美·蘇 대립의 兩極 현상이 '90년대초 끝나면서 사회주의·자본주의 經濟體制의 統合과 國境없는 無限 競爭의 經濟秩序가 태동

\* 베를린 장벽 붕괴('89. 11) → 舊소련 해체('91. 12) → WTO 발족('95)

### □ 글로벌 經濟體制의 특징

- 經濟的 意味의 國境이 소멸하여 國民國家의 개념 퇴조
- WTO, OECD 등 國際機構가 世界經濟秩序를 주도
- 美國式 政策·規範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
- 世界的인 競爭力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 가능
  - 勝者獨占化 社會(The Winner-Take-All Society)가 전개
  - 巨大企業간에 국경을 초월한 大型合併과 戰略的 提携가 확산
  - 보다폰에어터치(통신, 영국) + 만네스만(통신, 독일) 합병(1,920억달러)
  - GM(미국)과 피아트(이태리)의 지분공유를 통한 전략적 제휴

### 나. 디지털經濟·知識基盤經濟로 이행

- 인터넷을 근간으로 情報가 전달되고, 假想空間에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전개
- 디지털 경제의 도래는 단순한 技術發達이 아닌 經濟·社會·文化 등 총체적인 文明史의 大變革(人類史 3

## 특 집 기업구조개혁과 경제정책

번째 革命)

\* [APEC 서울포럼](2000. 3. 31-4. 1)에서 앨빈 토플러는 교육, 지식 및 인적자원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, 한국도 이미 제3의 물결(The Third Wave)인 정보화 사회의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지적

□ 지식기반경제 · 디지털경제의 양상

○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'資本과 勞動'에서 '知識과 情報'로 급속히 대체되고 산업구조도 製造業중심에서 IT산업중심으로 변화

\* '95~'99년간 미국 IT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 : 30% (美 商務省, 2000. 6)

\*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관련 주요 경제지표(한국은행 추정치)

· '99년 GDP성장 기여도 : 45.6%(기타산업 54.4%)

· 연평균 실질성장률('85~'96) : 13.7%(기타산업 4.1%)

○ 電子商去來(B2C, B2B)가 급속히 발달

\*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70%씩 성장, 2003년경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(Wharton 계량 경제연구소)

○ 정보 · 상품 · 용역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直去來함에 따라 지점, 대리점 등 기존 유통조직과 같은 中間組織의 몰락

○ 한편, 情報隔差(Digital Divide)로 인한 所得隔差 심화, 해킹 · 바이러스 · 개인정보 誤濫用 등의 어두운 면도 부각

다. 消費者中心時代의 도래

□ 정보혁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情報의 非對稱性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市場競爭의 壓力으로 작용

○ 消費者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기업경쟁의 새로운 課題(New Frontier)로 부상

## 2 經濟環境 變化의 意味

- 우리 경제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 無限競爭時代에 適應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
- 대기업의 船團式 經營을 개혁함으로써 개별기업단위로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專門企業으로 거듭나야 함
- 이를 위해 短期的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企業構造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
- 中長期的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經濟運用의 기본 틀을
- 規制·保護·供給者 中心에서 自律·競爭·需要者中心의 市場經濟體制로 전환
- 기업, 소비자, 정부 등 經濟主體의 意識과 慣行까지도 市場經濟 시스템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혁신
- 결국, 21세기에 펼쳐질 經濟環境의 變化는 우리에게 패러다임(Paradigm)의 전환을 요구

## Ⅲ. 그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했나?

### 1. 經濟構造改革의 推進

- 98년초 우리 경제의 두가지 核心的인 問題는 外換不足 사태의 시급한 극복과 금융·기업 등 經濟의 構造的 脆弱性的의 근본적 해소
- 이는 우리 경제에 자유로운 競爭과 철저한 自己責任原則을 내용으로 하는 市場經濟原理를 튼튼히 정착시킬 때 비로소 가능
-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金融·企業·勞動·公共 등 4대 部門의 改革을 추진
-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구조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

### 2. 企業構造調整 推進戰略 : 「5+3」 原則

- 98. 1. 13 大統領 당선자와 5대 재벌이 합의한 「5大 原則」과 98. 8. 25 재벌개혁 후속조치로 합의한 「3大 原則」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
- 공정거래위원회는 債務保證 해소,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不當內部去來 차단 등의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

〈5大 原則 관련 제도개선 내용〉

원칙	주요 내용 (예시)
①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대 집단 結合財務諸表 도입(1999회계년도부터 시행)</li> <li>• 會計公示 강화, 분식회계·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</li> </ul>
② 相互債務保證의 解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新規 債務保證 금지, 2000. 3월말까지 既存 債務保證을 해소토록 公正去來法 改正</li> </ul>
③ 財務構造 改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財務構造改善約定을 통한 5대 그룹 200%미만 부채비율 달성 유도</li> <li>• 不健全費用에 대한 稅制上 不利益 부과 등</li> </ul>
④ 核心部門의 設定과 中小企業과의 協力 強化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不當內部去來 차단</li> <li>• 계열분리요건 완화(매출의존도 삭제)</li> <li>• 통합법인 설립 등 구조조정과정의 稅부담 완화 등</li> </ul>
⑤ 支配株主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少數株主權 강화</li> <li>• 上場法人의 社外理事(¼이상) 選任 義務化 등</li> </ul>

〈3大 原則 관련 제도개선 내용〉

원칙	주요 내용 (예시)
① 제2금융권의 支配構造 改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社外理事를 1/2 以上으로 構成</li> <li>• 少數株主權 행사요건을 上場會社의 절반으로 강화</li> <li>• 自己系列 投資限度 축소 (投信社 : 10% → 7%, 保險社 3% → 2%)</li> </ul>
② 循環出資 및 不當 內部去來 차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出資總額制限制度 재도입(2001. 4월 시행)</li> <li>• 大規模 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 의무화</li> </ul>
③ 變則 相續 및 贈與 防止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주주의 非上場株式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</li> <li>• 公益法人을 통한 계열사 지배 억제 등</li> </ul>

3. 그동안 改革의 成果

□ 巨視經濟指標로 볼 때 경제성장을, 물가, 국제수지 등이 크게 호전되어 “IMF 위기를 1년 반만에 극복”하였다고 평가됨

\* 經濟成長率 : ('98) △6.7% → ('99) 10.7%

\* 消費者物價指數 : ('98) 7.5% → ('99) 0.8% (史上最低)

\* 外換保有高 : ('97. 12. 18) 39.4억달러 → (2000. 8. 15) 904.2억달러

\* 經常收支 : ('97) △82억달러 → ('98) 405억달러 → ('99) 250억달러

□ 微視的으로는 기업의 財務構造가 대폭 改善

○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부채비율이 낮아짐

\* 4대그룹 부채비율 : ('98년말) 328.8% → ('99년말) 단순합산재무제표상 146.3%, 결합재무제표상 225%

○ 부당내부거래 억제, 감량경영, 금리하락 등에 따라 대규모 이익이 실현되고 R&D투자 여력이 증대

\* 30대그룹 당기순이익 : (98년)19.0조원 적자 → (99년)9.4조원 흑자

□ 大馬不死 神話가 退潮하고 '시장의 힘'이 작동하기 시작

○ 그룹규모를 불문하고 경영부실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기업은 위크아웃, 법정관리에 편입

\* 재계 2위 「대우」해체, 「새한」 위크아웃 등

○ 銀行파업시 7.11 하루동안 파업은행으로부터 파업불참 은행으로 예금이 2조원 이상 이동하여 파업은행을 압박

\* 예금부분보장제, 채권시가평가제 등의 도입에 따라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권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

#### 4. 未洽한 점

□ 船團式 經營이 지속되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미흡

○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는 실제 투입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所有構造 歪曲

- Cash Flow Share와 Voting Share간 현격한 차이

\* 30대 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4.5%(총수 1.5%)에 불과한 지분으로 43.4%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544개의 계열사를 지배(2000. 4월)

○ 부당내부거래 등 船團式 經營 관행이 지속

- 結合財務諸表 공시 결과 계열사간 내부매출 비중은 35%~40%로 높게 나타남



## 특 집 기업구조개혁과 경제정책

\* 4대그룹 내부매출비율: 현대 38.1%, 삼성 41.7%, LG 38.0%, SK 36.1%

- 금융기관, 해외펀드 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고도화·지능화

□ 대주주의 경영전횡 등 支配構造 왜곡

○ 社外理事制度, 集中投票制, 少數株主權 強化 등 그 동안 도입된 企業支配構造 改善施策이 아직 정착되지 못함

\* 사외이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 결여로 대주주의 경영전횡 견제에 실패

\* 30대 집단 12월 결산법인 517개 회사중 421개사가 정관으로 集中投票制를 排除하고 허용된 96개사도 실제로 행사된 사례가 없었음(2000. 4월 현재)

□ 産業資本의 第2金融圈 支配가 심화되어 금융기관의 기업경영 감시자 역할에 한계

### IV. 새로운 跳躍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?

#### 1. 持續的인 企業構造改革 推進

가. 不當內部去來 根絶

□ 不當內部去來는 재벌의 船團式 經營의 核心手段으로서

○ 獨立·中小企業의 경쟁기반을 박탈하고,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계열사로 유출시켜 기업집단의 核心力量을 약화

#### 〈不當支援行爲의 類型〉

- 계열회사 발행 企業어음이나 회사채 등의 高價 買入
- 콜자금 등의 무이자 대여, 할부금융대금의 지연이자 과소 수령
- 공장용지분양, 건설공사, 용역 등의 대금 미수령 등

□ '98년 이후 7차례의 조사를 통해 총 25조 7,650억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2,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

(단위 : 억원)

	30대그룹	친족분리회사	공기업	합계
지원성거래	242,932	10,786	3,933	257,651
과 징 금	2,019	75	37	2,131

□ 부당지원행위가 이해관계자에 의해 事前 豫防될 수 있도록

○ 1~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制度 導入('99. 12월 공정거래법 개정)

□ 현재 4대 기업집단에 대해 分社企業 不當支援, 偽裝系列社 등 변칙적 탈법행위에 대해 조사중

□ 2001. 2월 만료되는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의 연장 추진

나. 相互債務保證의 금지

□ 相互債務保證은 金融資源의 偏重配分과 企業集團 全體의 同伴不實 초래 등의 폐해 초래

○ IMF 經濟危機時 개별기업의 도산 → 그룹 전체의 도산 → 금융위기 → 외환위기로 증폭되는 뇌관 역할

□ '98. 4월부터 新規債務保證을 전면 금지하고, 既存債務保證은 2000.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公正去來法 개정('98. 2)

□ 그동안 企業의 早期 解消努力을 유도하고 金融機關의 過多한 保證要求慣行을 개선한 결과

○ '97년말 33.6조원의 債務保證額中 解消時限이 2000. 3월말인 債務保證은 完全 解消

	97. 12	98. 12	99. 12	2000. 3월말*
30대 집단 채무보증(조원)	33.6	12.3	4.3	0

\* 해소시한이 2001. 3월말인 채무보증 1.5조원 제외

□ 相互債務保證의 完全 解消로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축소

○ 借入에 의한 방만한 擴張經營과 船團式經營이 抑制, 連鎖倒産의 危險이 감소

□ 앞으로 企業集團間 交叉債務保證 등 脫法的인 新規債務保證을 철저히 禁止

다. 出資總額制限制度의 차질없는 施行

## 특 집 기업구조개혁과 경제정책

-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架空資本 형성을 통해 系列擴張을 용이하게 하고, 船團式 經營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이를 억제키 위해 87년 出資總額制限制度를 도입
- 98. 2월 외국인에 대한 敵對的 M&A 허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동 제도를 폐지
- 그러나, 제도 폐지이후 계열사간 循環出資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심화, 형식적 부채비율 감소 등 副作用 초래
- 또한,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&A가 한건도 없었음
-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出資總額制限制度 도입
- 出資限度 : 純資産의 25% 이내
- 施行日 : 2001. 4. 1(시행일로부터 1년간 解消時限 부여)
- 동 제도가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되 構造調整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例外認定 기준 마련
-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統合法인에 대한 출자
- 기존사업을 物的分割하여 설립한 分割法人에 대한 출자
- 外國人持分이 30% 이상 最多出資者인 合作法人에 대한 出資 등
- 앞으로 30대그룹의 出資動向을 점검하여 出資限度超過額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해소기한 이전에 自律 解消토록 유도

\* 30대그룹의 出資限度超過額(2000. 4월 기준) : 19.8조원

### 2 競爭制限의 規制의 改革

- 市場原理의 원활한 作動을 위해서는 먼저 『競爭의 틀』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중요
- 과거 대기업 육성 위주의 産業政策에 치중함에 따라 各種 規制, 獨寡占 形成 등 競爭制約 要因이 制度化

\* 최근 OECD는 「한국 규제개혁 보고서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

## 고 평가

- '98. 2월 출범한 新政府는 國務總理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「規制改革委員會」를 설치
- 총 1만 1천여건의 규제중 48%를 폐지하고, 22%를 개선하는 등 70% 정도를 整備
- 그간 공정위는 게임의 룰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競爭制限的 規制改革을 주도
- '99년에는 주요산업의 진입제한, 수출입 관련 규제 등 12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, 규제개혁 위원회에 상정
- 競爭制限的 規制 철폐는 경쟁촉진을 본령으로 하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로서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
- \* OECD는 '97년 「규제개혁권고」를 통해 “경쟁주창자” (competition advocacy)기능을 갖는 경쟁당국이 규제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권고
- 정부기능 분석에 기초한 규제개혁으로 數量보다는 ‘質 위주’의 規制改革을 추진할 계획
- 시장의 기존 사업자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진입제한 철폐 등 競爭促進的 觀點 위주로 검토
- 특히, 우리경제의 디지털화와 電子商去來의 발전에 맞게 “디지털”이란 새로운 잣대로 기존규제를 果敢히 改善
-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물품운송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物流分野 關聯規制 개선
- 예) 貨物自動車運輸業의 登錄基準 대폭 완화 등
- 과거에는 규제가 아니었으나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不必要하거나 過剩規制에 해당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
- 예) 事務所기준, 最低資本金기준, 設備·技術人力기준 등
- 消費者의 情報獲得을 제한하는 主要 서비스分野의 規制 개선
- 예) 醫師 등 專門職種의 廣告制限規定 폐지
- 地方自治團體, 公企業 등 一線機關의 경쟁제한적 규제도 과감히 발굴·改革,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體感度를 提高
- 예) 地自體가 條例·例規 등을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 위임범위를 벗어난 過度한 基準設定 사례 등

## 특 집 기업구조개혁과 경제정책

### 3. 獨寡占 構造 改善 및 談合慣行의 根絶

#### 가. 企業結合에 의한 獨寡占 形成의 防止

-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적으로 大型合併이 증가하는 가운데 各國의 競爭當局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M&A 必要性은 認定하되, 獨寡占 우려가 있는 M&A는 엄격히 措置

\* 미국 FTC는 BP AMOCO와 ARCO(Atlantic Richfield Company)간 합병(규모 230억 달러)에 대해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명령 제기(2000. 2. 2)

- 國內에서도 企業構造調整 推進에 따라 企業結合이 크게 增加

\* 企業結合 增加趨勢 : ('97) 418건 → ('99) 557건

\* 外國企業에 의한 企業結合 : ('97) 19건 (8억달러) → ('99) 168건 (87억달러)

- 앞으로 市場의 世界化 趨勢 등을 勸察하되 獨寡占이 深化될 可能性이 있는 企業結合에 대해서는 積極 對處

#### 나. 獨寡占 市場構造의 改善

- 特定産業 保護·支援施策의 추진 등에 따라 많은 업종에서 獨寡占 市場構造가 장기간 固着化

- '99년도 시장지배적 품목 129개중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99개 (전체의 76.7%)

-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철강, 자동차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'97년부터 독과점요인이 되는 제도·관행의 개선시책을 강력히 추진

-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通信, 신용카드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할 계획

#### 다. 慣行화된 談合慣行의 根絶

- 談合은 競爭을 源泉의으로 排除하여 市場經濟秩序 定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선진 각국은 이를 강력히 규제

\* OECD는 가격담합, 시장분할 등 핵심카르텔의 폐지를 권고(98. 3)

\* 미국은 비타민 제조회사들의 國際카르텔에 대해 8억9천만불의 벌금을 부과 ('99. 5)

□ 공정위는 經濟全般에 體質化된 談合慣行을 근절하기 위해 카르텔 制度의 정비와 談合行爲 감시를 강화

○ OECD의 권고에 따라 99. 2월 카르텔 一括整理法을 제정, 그동안 용인되어 온 18개 법령상 20개 카르텔을 정비하고 履行實態를 점검

○ 그 동안 獨寡占 市場의 價格談合, 公共建設工事의 入札談合 등을 적발하여 총 534억의 과징금을 부과

\* 과징금 : 철강업체 163억원, 에어컨 266억원

\* 入札談合에 대한 公正委의 단호한 조치결과, 公共工事 平均落札率이 87%('97) → 74%('99)로 하락 (연간 4조원 예산절감효과)

□ 앞으로도 建設 入札談合은 嚴重 措置하고, 國民生活와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價格談合도 철저히 是正

#### 4. 消費者主權 確保를 위한 基盤 擴充

□ 消費者의 알 權利를 충족시키고 合理的인 購買選擇이 가능하도록 情報提供을 擴大

○ 消費者 情報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도록 「消費者綜合 홈페이지」(www.consumer.go.kr) 구축 (2000. 3)

- 정부 부처,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消費者 情報를 인터넷상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檢索이 가능

○ 消費者가 알아야 할 重要情報를 表示·廣告에 포함토록 하는 重要情報公開制度를 시행 (2000. 4. 1)

- 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業種이 공개해야 할 사항을 既 告示

- 앞으로 對象業種을 계속 擴大해 나갈 계획 (예 : 禮式場業 등)

□ 온라인상의 不公正行爲 감시, 다양한 消費者 情報의 수집·유통 및 消費者 意見의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44개 사이버단체로 「사이버 消費者協議會」 구성·운영

□ 消費者 被害豫防을 위해 不合理한 約款을 積極 改善

○ 복잡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400여종의 約款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簡素化

## 특 집 기업구조개혁과 경제정책

○ 國民生活과 밀접하고 消費者 不滿이 많은 分野부터 標準約款의 普及을 지속적으로 擴大

\*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23개 既 普及

### 5. 디지털 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與件 造成

#### 가. 벤처企業의 活性化 支援

- 디지털 經濟로의 轉換過程에서 IT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급성장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成長엔진으로 등장
- 企業構造調整 結果 大企業에 偏重되었던 人力과 資金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여 디지털 經濟의 기반 마련
- 벤처기업이 디지털經濟를 주도하고 大企業과 함께 우리 經濟의 兩軸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
- 공정위는 벤처起業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벤처산업 活性化를 위해 積極 勞力할 계획
-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共同行爲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彈力的으로 적용
-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持分率 30%이내의 出資는 出資總額制限制度의 例外로 인정(2000. 4월 시행령 개정)
-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투자 동향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

#### 나. 電子商去來의 發展을 위한 市場環境 造成

- 電子商去來의 발전은 기존의 製造業 - 代理店 - 消費者 流通體系에 大變革 초래
- 生産者와 消費者의 직접 연결로 中間流通組織이 대폭 감소되고 流通·在庫費用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반면,
- 인터넷 流通業體(On-line 업체)와 대리점 등 既存 流通業體와의 葛藤이 표출

\* 가전, 자동차 등의 인터넷 저가판매 방해행위 발생

- 電子商去來 활성화를 위해 公正한 競爭秩序를 確立

- 기존 流通業者나 製造業者가 電子商去來 事業者의 販賣를 妨害하는 行위를 是正
- 디지털시대의 필수적인 통신설비 등 정보인프라에 접근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
- 電子商去來는 非對面去來의 특성상 消費者 不安이 장애요인이므로 消費者 欺瞞行爲를 엄격히 是正하여 信賴基盤 확보
- 99. 12월 제정된 OECD가이드라인 내용과 소비자의견을 반영하여 「電子去來 消費者保護指針」을 제정·시행(2000. 1월)

\* 운송비 부담주체, 반품·환불 조건 등 去來情報의 明示를 義務化

-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標準約款을 승인(2000. 1. 28)
- 通信販賣등을 규율하는 「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」을 電子商去來分野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基本法으로 보완·발전

## V. 맺음말

- 21세기에는 세계를 무대로 한 競爭이 더욱 격화되고 知識의 축적과 활용이 國家競爭力을 결정짓는 核心要素가 될 전망
- 經濟環境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여 經濟危機의 발생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跳躍을 이루기 위해서는
  - 「競爭·自律·責任」을 근간으로 하는 市場經濟原理를 경제운용의 기본 틀로 튼튼하게 정착시켜야 함
  - 이를 위해
    - 政府는 경제력집중의 억제, 규제개혁, 독과점 근절 등의 시책추진을 통해 “公正한 競爭의 場”을 마련하고
    - 企業은 채무보증, 내부거래 등 船團式 經營에서 벗어나 個別企業 위주로 核心力量을 집중하여 선진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競爭力을 높이는데 노력하며
    - 消費者는 合理的 選擇을 통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켜 스스로 消費者主權을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
  -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意識과 慣行이 市場原理에 걸맞게 변화할 때 경제의 善循環 고리가 정착됨으로써
  - 우리경제가 先進經濟強國으로 새롭게 跳躍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